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임 도빈**

〈目 次〉

- | | |
|------------------|-------------------|
| I. 문제제기 | IV. 한국공무원의 윤리적 특성 |
|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 V. 맺는 말 |
| III. 행정윤리 설문지 작성 |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상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행정윤리의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공무원들은 윤리적 감수성이 높은 편은 아니며, 남을 포용하려는 원만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16개의 유의미한 설문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하여 6개(4개로 축소)의 윤리관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한국 공무원들의 윤리적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기술하였다. 경쟁적 공리주의, 인본적 절대주의, 이기주의, 약한 상대주의라는 측면에서, 부처별, 직급별, 연령별, 근속연수별 차이도 검증하였다.

【주제어 : 행정윤리, 절대주의, 공리주의, 이기주의】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2001년 선도연구자 지원(과제번호 C00160)을 받아 수행되었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

I. 문제제기

민주국가의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무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존재는 행정관료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들은 행정관료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이현수, 1998).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스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몇몇 부패공무원을 대서특필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의 행정서비스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실망 내지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비교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러한 불만족이 나타날까?

그것은 정책의 목표설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목표가 잘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다. 좀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좌우하는 행정윤리라는 문제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정책대상집단의 윤리적 태도와 정책의 내용이 갖고 있는 윤리적 특성이 맞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만감을 갖게 된다. 즉, 정책을 산출하는 공무원들이 정책이 가져오는 윤리적 효과(impact)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비윤리적인 정책을 양산하였거나, 공무원 개개인들이 부패 등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윤리는 개인의 의식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에는 개인의 행태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치관이나 구체적인 행정방식까지 포함한 사회규범을 Bourdieu(1989)는 ‘코드(code)’라고 하고 명명한 후 다양한 사회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어떤 사람에게 옳은 코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른 코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서로 상대방을 옳지 못한(즉, 비윤리적인) 사람으로서 비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윤리가 공무원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특정행위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나 억제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한 후에 사후 정당화를 하는 데 작동한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에는 윤리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윤리가 일반국민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행정조직별로 하위 윤리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행정의 현실

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유형의 행정윤리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상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행정윤리의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이렇게 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한국 공무원들의 윤리적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기술하려고 한다. 본 연구가 향후 한국 행정윤리에 대한 심오한 경험적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1. 윤리관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와 같은 시각에서 윤리관이나 윤리적 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행정윤리에 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윤리에 관해서는 주로 학자들이 철학적 사유결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G. Frederickson, T. Cooper(1998), M. Harmon(1995)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행정윤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시장(market) 중심적 사고를 하는 미국사회에서 윤리적 하부구조(ethical infrastructure)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예(禮)를 중시하는 등 매우 윤리적인 사회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다. 따라서 윤리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 혹은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그 실체를 규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계율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공직부패의 실태나 공직부패문제의 해결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행정윤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무원 개인의 부패라는 협소한 측면에서 다뤄져 왔다(임도빈, 2002)¹⁾. ‘윤리적 공무원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전통적인 행정윤리보다 논의를 격상시킨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서 김호섭(1991), 박홍식(2000), 이상안(2000), 임의영(1996;2000) 등의 것이 있

1) 익명의 한 심사자도 설문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행정윤리를 나타내는 ‘성실성, 청렴성, 공익성, 봉사성’ 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본 연구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공무원 개인의 행동규범’에 국한되는 이런 통상적인 행정윤리를 뛰어 넘어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윤리문제를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으나 이들도 이론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혹은 조직에서 억압된 공무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방시켜 진정한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가져야 하는 옳고 그름에 관한 윤리관에 대한 논의를 결여한 채 의무론적 시각에서 공무원의 윤리성을 제고시킬 목적 하에 고안된 각종 외부 통제장치는 실효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관료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의 문제가 미국행정윤리 논의의 중요한 이슘이다(Fox, 1994). 이때 '부당성'에 대한 기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사례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군인이 상관의 발포명령에 복종하느냐 여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인명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가진다면 발포명령은 부당하므로 거부해야 하는 반면, 인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약한 반면 빨리 혼란한 상황을 종식시켜 정치경제적 안정을 시켜야 한다는 (단지적인 경제적) 실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리 부당한 명령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 공무원들이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가를 먼저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관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공무원의 윤리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하기 시작한 연구가 박정택(1990), 김신복(1989), 노화준(1989;2001), 정용덕(2001) 등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도 과연 한국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윤리문제를 과학적(즉,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가치인식 불가론과 자연주의 윤리설로 구분할 수 있다(김항규, 1994). 가치인식 불가론이란 논리실증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윤리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서 행태주의가 그 예이다. 이 경우 윤리의 연구는 정상적인 인간에게 부여된 선천적 능력인 직관(intuition)에 의하여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자연주의 윤리설은 가치가 사실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가치는 심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치판단도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후기 행태주의나 후생경제학적 사고가 그 예이다. 본 연구가 후자의 입장에 있음은 물론이다.

윤리상태를 설문지를 통하여 규명하려는 본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일찍부터 발달해온 심리학 분야의 많은 성격검사를 들 수 있다²⁾. 흔히 알려진 지능검

2) 한국에서 사용되는 각종 심리검사의 실제 예에 관해서는 <http://psychtest.educyber.org/>를 참조할 것.

사는 물론이고 로르샤하 성격검사, 주제통각 검사, MBTI, 에니어그램(Enneagram)이 그 예이다(이영진, 2002:35-36). 이를 조사문항들은 간접적으로는 무엇이 옳은 것이라는 가치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직접적으로 윤리성을 측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도덕성발달에 대한 측정도구는 Kohlberg(1969)와 Rest(1979)에 의해서 주로 발달되었다. 이들은 도덕성의 발달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올라간다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Rest(1978)는 설문지에서 도덕성여부를 직접 묻지 않고, 특정상황을 가정한 후 응답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객관식 선다형 중에서 선택하여 답하게 함(The Defining Issues Test: DIT)으로써 간접적으로 윤리성을 측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DIT설문지법이 개선되어 높은 신뢰도의 표준화된 지문이 개발되었다³⁾. 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정철현(1997)은 환경부 공무원과 타부서 공무원간의 환경의식에 관한 검증을 한 결과 미세한 차이나마 환경공무원의 윤리의식이 강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계서성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즉, 하위단계의 윤리관이 상위단계윤리관과 정말 계서적 관계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윤리적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조차도 확답을 할 수 없으므로, 계서성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상술한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도덕성발달 수준에 대한 측정은 무의미해진다. 도덕성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이전에 조사대상자들이 어떤 것을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느냐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고 그른 것에 관한 다양한 윤리관이 있다는 윤리적 다원주의 관점에서 윤리관을 측정하도록 만든 설문지도 있다. 46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 이 설문지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윤리적 차원을 관련 문항 앞에 제시하고 자신이 문항의 서술내용에 동의하는가 여부를 5점 척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Hinman,1998:7-10)⁴⁾. 그런데 이 설문지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초보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나아가서 이 설문지를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각 문항 앞에서 그 문항들이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윤리관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인들

3) 구체적인 참고자료는 정철현(1997:80)을 참조할 것.

4) 7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 utilitarianism여부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하나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항 15. "I do not care what motivates other people, I judge them solely on the basis of what they do."

의 솔직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한국인은 설문조사가가 아무리 ‘자신의 생각’을 답해달라고 명시해도 무의식적으로 조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정답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적인 문화를 묻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공무원들이 무엇이 옳은 것 혹은 선한 것으로 보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시도로서 행정윤리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로 하는 것은 ‘윤리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매우 주관적이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윤리적 다원주의이다. 특히 유교와 같은 동양의 윤리에 서양적 윤리가 혼합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적 내용을 어느 정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야 비로소 문제의 치유책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표본의 추출방법 및 특성

본 연구의 1차적 과제는 한국공무원의 윤리관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윤리관은 심리적 사실이기는 하나 설문지를 통하여 일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측정하려고 한다.

공무원(혹은 공직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달라지지만, 백여 만 명이 넘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윤리관을 설문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즉 대표성이 있는 표본추출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차후에 다른 부류의 공무원을 포함하는 후속연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중앙부처의 ‘부(部)’ 이름 18개 중 4개를 무작위추출한 결과 교육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농림부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를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본부의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본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소속 기관에 비하여 일선집행업무보다는 기획과 평가, 제도개선 등 거시적인 업무의 비중이 더 크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일선기관에 비해 그 부처의 핵심기능이 요하는 다양한 윤리문제에 접하리라는 이유에서이다.

채택된 4개 부처의 공무원 중 누구에게 설문조사를 할 것인가는 무작위 추출이 가장 대표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무작위 추출방법은 업무량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별 차이가 많고 조직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설문지 회수가능성 면에서도

편차가 많고, 표본으로 추출된 공무원들에게 신뢰성 있는 응답을 보장받기 어렵다. 따라서 부처 내 표본추출은 그 부처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기관급 공무원 한 사람에게 직급별, 연령별, 직렬별로 가능한 한 고르게 분포되도록 유의하여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하는 식으로 유의추출방법을택하였다⁵⁾. 무작위추출이 왜곡된 결과를 방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한국 중앙부처의 경우 너무 바빠서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리 응답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의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의 대표성을 회생할 수밖에 없었다.

<표 1> 표본의 분포

		농림부	정통부	교육부	건교부	계
직급분포	2급	1	0	0	0	1
	4급	1	4	8	7	1
	5급	25	13	51	33	1
	6급	61	36	29	55	1
	7급	9	14	14	9	1
	8급	3	2	4	1	1
	9급	4	6	4	2	1
	기능직, 무응답	11	4	22	17	54
직렬분포	행정	60	41	81	70	252
	기술	12	6	1	26	45
	기능	4	4	6	5	19
	기타직렬	25	6	14	22	67
	무응답	14	23	30	1	68
계		115	79	132	124	450

* 3급 응답자는 하나도 없음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에 유의미한 것만 보면 농림부 115(25.6%), 정통부 79(17.6%), 건교부 132(29.3%), 교육부 124(27.6%)로서 총 450개이다. 본부 직원수라는 모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정통부가 다른 세 개의 부에 비하여 적은 숫자로 대표되었다. 표본을 유의추출하였기 때문에 부처별로 직급별, 연령별, 근무연수별, 직렬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표 1> 참조). 따라서 부처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상술한 변수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5) 설문배포를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상의한 결과, 이것이 대리응답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것이다.

III. 행정윤리 설문지 작성

본 연구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암암리에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1. 사전조사(pretest)

경험적 조사방법중의 하나로서 설문지법은 언어적 의사소통방법을 통하여 직접 연구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설문지법에서 변수의 측정은 일련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에 기초한 응답척도(self-report measures)에 의하여 이뤄진다. 본 조사용 설문지를 만들 때 유념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문항을 포함하면 응답자의 주의집중력이 감소되어 응답의 신뢰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총 문항수는 20문항 내외로 한다. 특히 응답자가 고위직일수록 바쁜 일과 때문에 긴 설문지에 직접 응답할 가능성 이 낮아진다.

둘째, 지문의 내용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평소에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답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셋째, 한국사람들에게 ‘윤리’라는 말은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였다. 예컨대 설문지의 제목도 ‘가치관조사’라고 하였고, 조사에 응해달라는 내용의 인사말에서도 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사전검사를 하였다. 사전검사는 모 대학의 고위정책결정자 과정(교육기간 6개월)에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설문조사는 2002년 3월과 2002년 9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과 준공공기관의 간부급과 민간기업인, 정치인 등으로 각각 35명과 38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비교적 윤리관을 잘 나타낸다고 보여지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에 걸친 예비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지나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한 문항이나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응답되는 문항을 제외하는 방식을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정한 결과 최종조사를 위해 채택된 문항들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2. 최종문항의 선정

두 번의 예비조사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 본 조사에서도 예비조사 때 생긴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문문항은 개인별 윤리관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를 측정할 수 없는 문항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응답지에 편중된 단순분포(frequency)를 보인 1번, 10번, 16번, 그리고 17번 문항이 문제시되었다.

1번 질문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유효응답자의 89.5%가 아주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월드컵이 열린 직후인 2002년 12월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일종의 애국심 혹은 민족자존심이 발현되어 이러한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하여 10번은 지참금을 덜 가져온 신부를 화형시키는 경우, 그리고 17번은 Aids에 걸렸을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전염시키느냐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효응답자의 90% 정도가 ‘약간 부동의’ 혹은 ‘아주 부동의’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16번 환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히 부모나 가족의 질병 등을 예상해서인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인의 온순한 성격에 비춰볼 때 공개화형을 시킨다거나 비록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도 타인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전염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반대하는 태도가 지배적인 것 같다.

예비조사 때에는 비교적 분산된 응답형태를 보이던 위 문항들이 본 조사에서는 변별도가 낮은 것은 본 조사의 대상이 주로 중하위직 국가공무원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비조사시 표본의 수가 적어 국민전체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본 조사는 공무원의 특성을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개고기와 화형, 에이즈, 환자에 거짓말 등의 예에서 볼 때 한국의 중앙공무원들은 ‘민족우월적’이며 ‘비공격적’ 혹은 ‘인간존중’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태도와 인명을 중시하는 것은 대다수 한국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윤리적 사고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요인분석결과

요인분석은 기존 이론적 구성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확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탐색용으로도 사용된다.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의 윤리관을 측정하는 도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탐색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주요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아이겐값이 1.0이상인 것만을 추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설명 가능한 분산량은

10. 행정논총(제41권 제2호)

다음과 같다.

<표 2> 요인분석 분산표(total variance explained)

요인			
	아이겐값	분산(%)	누적(%)
1	2.125	13.282	13.282
2	1.724	10.773	24.055
3	1.620	10.124	34.178
4	1.120	6.998	41.176
5	1.054	6.587	47.763
6	1.008	6.298	54.061

추출 방법 : 주요인 분석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량은 전체의 약 54%이다. 총 16개의 문항을 유사한 6개 집단이 물음으로 요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이 결과가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윤리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즉, 유사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공무원들의 개인간 윤리적 특성은 차이가 있으나, 설문지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포착할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 요인 매트릭스(component Matrix)

	요 소					
	1	2	3	4	5	6
문항 8		-.141	-.195	4.780E-02	.179	-.119
문항 7		1.760E-02	-.338	7.167E-03	.229	-.161
문항 3		.278	.242	2.469E-02	-.266	-.123
문항 12		.170	.209	5.233E-02	7.514E-02	-.274
문항 9	-.319		.286	9.540E-03	.210	.300
문항 11	-.139		-6.595E-02	.348	.238	-.146
문항 18	-7.694E-02		-.139	-.141	.262	8.222E-02
문항 4	.309		-.225	9.576E-02	-.202	-.170
문항 13	-.302	.302		-.137	-.179	-.212
문항 5	.413	-4.738E-02		6.644E-02	.274	.335
문항 2	.158	.415		9.967E-02	-.225	4.380E-02
문항 20	-.142	-.350		.101	.381	-.270
문항 19	.206	-.285	.245	.617	.126	4.344E-02
문항 15	.291	-.268	.340	-.493	-.212	-.212
문항 14	.173	-.126	-4.500E-02	.367	-.523	.416
문항 6	.445	.157	3.192E-02	-.403	.212	.527

추출 방법 : 주요인 분석

채택된 문항들이 6개 요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묶이는가를 다음 요인 매트릭스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1로 묶을 수 있는 문항들은 8,7,3,12번이다. 8번과 7번 문항은 양자 모두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감수해도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질문들이다. 이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사고를 대변하는 것이다. 3번의 문항도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중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경쟁사회가 그 사회의 총체적인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생각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와 상통하는 점이 많다. 12번의 내용은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된 세대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하여 어떤 윤리적 행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요인1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사회의 윤리인 ‘경쟁적 공리주의’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두 번째 요인을 중심으로 묶을 수 있는 문항들은 9,11,18,4번이다. 이들 문항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요인1과는 극히 대조되는 것으로서 비록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인간성이나 생명을 짓밟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유교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적 윤리가치를 나타내는 문항들이다. 특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수단시한다는 것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지상명령(categorical imperatives)과 매우 일치하는 질문들이다(Kant, 1986). 이를 우리는 ‘인본적 절대주의(humanistic absolutism)’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13, 5, 2, 20번 문항을 포함한다. 13번 문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문항들은 국가사회나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폐락과 행복을 지상의 가치로 여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가능한 국가나 공동체의 존재를 축소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각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남보다는 자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에서 ‘이기주의(egoism)’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Rachels, James. 1971). 문항의 내용으로 보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된 반사회적 특성을 띤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13번 문항은 최근 한국사회의 민주화경향에 맞추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⁶⁾.

나머지 4개 문항은 3개의 요인으로 각각 묶여지는데 이들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6) 질문의 내용상으로 보면 요인 2에 묶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출된 요인과의 상관계수를 보면 이 문항은 다른 요인과는 음의 관계가 있으나, 요인2와는 0.302, 요인3과는 0.521의 관계가 있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즉, 요인 4는 문항 19와 15를 절대치 0.4이상인 상관관계로 묶고 있지만, 요인 5는 문항 14, 요인 6은 문항 6으로 각각 하나의 한 두 문항으로 분산되어 있다. 사실 요인분석을 하는 이유는 몇 개의 유사한 요인으로 묶자는 것而已 때문에 하나의 문항밖에 갖고 있지 않은 요인은 본 연구의 목적 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네 문항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5는 전반적으로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며, 요인 6은 문항 14와 6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로 묶는다. 결국 이들 문항들이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으로 묶지 못했고 이 요인으로 인하여 본 요인분석모델의 전체적인 설명력이 저하되지 않았는가 추측된다. 따라서 이들 네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으려고 노력한다면, 14번을 제외하면(이것은 다른 문항과 음양의 상관관계가 다르다) 대체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식의 사고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기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되 남도 인정하면서 공동체의 행복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약한 상대주의’적 윤리관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추출한 경쟁적 공리주의, 인본적 절대주의, 이기주의, 약한 상대주의는 서양의 윤리사상을 종합한 윤리유형과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다(임도빈, 2002). 같은 요인으로 묶인 질문들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필자의 이론적 선형연구와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난다. 또한 각 요인에 분류된 문항간에 개념적 친소(親疎)가 약한 것이 간혹 섞여있다는 약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관유형을 추출했다는 것은 곧 이를 기초로 좀더 세련시킨다면 좋은 분석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IV. 한국공무원의 윤리적 특성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단순히 개인 행태의 차원에서 부패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소극적 윤리), 그들이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그것이 정책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즉, 적극적 윤리)해야 할 것이다⁷⁾.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정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술한

7)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결과에 윤리적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사고(평소 생각)가 실제 업무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향후 이뤄져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과정을 통해 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한국 공무원들의 윤리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윤리의 일반적 특성

요인분석을 하기 전 설명하였듯이 변별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된 문항들은 본 연구의 대상들이 ‘민족우월적 비폭력성’을 대표적 윤리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외에 설문지에 포함된 다른 문항들을 가지고 한국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윤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윤리성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자신의 윤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지나온 삶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려할 때 나 자신은 윤리적인 사람이다’이다(문항21)라는 서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윤리성에 대한 자기평가

	응답자	%	누적 %
매우 그렇다	26	5.8	5.8
그렇다	211	46.9	53.1
그저 그렇다	174	38.7	92.2
그렇지 않다	34	7.6	99.8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100.0
무응답	4	0.9	

총응답자 중 자신이 매우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전체의 5.8%이고 전혀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전체의 0.2%로 적어도 자신에 관한 한 극단적인 평가를 하기 싫어하는 한국의 문화에 비춰볼 때 놀라운 조사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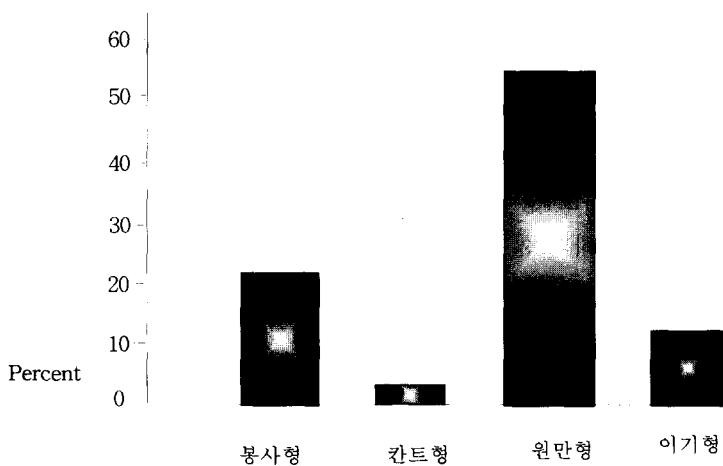
그러나 ‘그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자신의 윤리성에 대한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는 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합하면 전체의 39%에 육박한다는 것은 문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전혀 윤리적이 않다고 윤리적이지 않다고 답한 수까지 합하면 이를 윤리취약계층은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자기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이 대체로 어떤 유형을 바람직한 윤리적 모델로 생각하는가

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윤리적 특성이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짧은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즉 부록에 제시한 설문지 22번과 같이 연극을 해야하는데 자신이 맡고 싶어하는 역으로 투사(projection)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다.

응답지에서 제시한 역할은 각각 대조적인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일단 연극이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모두가 맡기를 싫어하는 역은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봉사형’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둘째 응답지인 ‘살인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비인간적인 역’은 비록 연극이기는 하지만 평소에 칸트적 인간존중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태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악역, 선한 역 등 여러 가치관을 가진 여러 인물들과 잘 조화하는 역은 폭넓은 이해를 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뚜렷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나타내기 싫어하면서 동시에 남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제시한 관객의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역은 일종의 스타의식 내지 남이 무엇을 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역을 하고자하는 ‘이기주의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봉사형 118명(26.8%), 칸트형 15명(3.4%), 원만형 239명(54.2%), 이기형 69명(15.6%) 등이다. 상술한 %는 무응답 9명을 제외한 수치이다.



<그림 1> 역할선택 분포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만형과 봉사형이 주를 이루나, 본인을 드러

내고 싶어하는 자기 과시형 혹은 이기주의형도 전체의 15%에 이름을 알 수 있다.

2. 부처별 특성

특정 윤리관이 어느 부처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가는 행정윤리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철현(1997)은 환경부처 공무원과 다른 부처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대해 연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이 더 중요한 가치관이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좋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서 윤리성의 성숙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본 연구의 관점은 이러한 전제가 되는 가치에 대하여 좀더 분석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네 가지 유형의 윤리관 중에서 어느 윤리관이 어느 부처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알아 보는 것이다. 비교의 방법은 앞에서 각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채택된 문항에 대한 점수를 평균하는 것이다. 즉, 응답자 각 개인별로 ‘경쟁적 공리주의’, ‘인본적 절대주의’, ‘이기주의(13번 제외)’, ‘약한 상대주의(14번 제외)’에 관련된 문항에 답한 5점 척도 수치를 각각 합한 후 문항수로 나눈 값이다⁸⁾. 평균값은 비율척도이므로 부처간 각 윤리관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표 5> 부처별 윤리관 특성비교

부처		경쟁적 공리주의	인본적 절대주의	이기주의	약한 상대주의
농림부	평균	2.8606	2.3728	3.0030	3.3065
	인원	113	114	111	112
	표준편차	0.6178	0.5705	0.6985	0.6361
정통부	평균	2.7051	2.2660	3.0779	3.3291
	인원	78	78	77	78
	표준편차	0.6355	0.6413	0.7232	0.7959
교육부	평균	2.8712	2.5308	3.0814	3.3434
	인원	130	130	131	132
	표준편차	0.5183	0.5689	0.6339	0.6273
건교부	평균	2.7317	2.3627	3.1452	3.3199
	인원	123	122	124	124
	표준편차	0.6032	0.5474	0.6337	0.6032
소계	평균	2.8007	2.3975	3.0790	3.3251
	인원	444	444	443	446
	표준편차	0.5920	0.5825	0.6663	0.6536

8) 이하의 논의도 이와 동일함.

경쟁적 공리주의란 측면에서 볼 때, 농림부와 교육부 공무원들이 2.87정도로 다른 두 부처의 공무원보다 평균 0.15점(5.0만점)정도 더 높은 공리주의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인본적 절대주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보다 평균 약 .2점 정도의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 추정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General Linear Model로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6>이다⁹⁾.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부처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본적 절대주의뿐이다. 경쟁적 공리주의는 유의확률 0.1수준을 약간 벗어나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에 비하여 인본적 절대주의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리고 이런 특성이 그들 부처의 업무수행 상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차후에 심층연구를 요하는 것이지만, 흥의인간의 교육이념을 실현시키는 교육부 직원들의 특성상 바람직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부 공무원이 인본적 절대주의적 윤리관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임한다면 그 행정활동은 학생들의 인간주의적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표 6> 부처간 윤리관차이 검증

종속변수	Type III Sum of Squares	자유도	Mean square	F값	유의확률	R자승
상대주의	1.418	3	0.473	1.068	0.362	0.007
이기주의	5.320E-02	3	1.773E-02	0.041	0.989	0.000
절대주의	4.587	3	1.529	4.637	0.003	0.031
공리주의	2.149	3	0.716	2.064	0.104	0.014

3. 연령대별 특성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연령을 숫자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육체적 연령이 윤리관의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요즘 386세대, 476세대 등 세대별로 하위 문화가 다르다고 구분 짓는 연령층을 중심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았다. 즉, 20대, 30대, 40대, 50대의 10년 간격으로 나누어 General Linear Model에 의한 분석을 하였다. 검증해본 결과 0.05유의수준에서 ‘경쟁적 공리주의($p=0.032$, R자승=0.021)’, ‘이기

9) General Linear Model분석법은 기본적으로 ANOVA분석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나 예컨대 집단 간 표본크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정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하의 분석내용을 위해 양자 기법 모두를 적용하여 보았으나 각 변수별 유의미성 여부는 양자가 모두 일치한다.

주의($p=0.005$, R 자승=0.030)¹⁰⁾만 세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경쟁적 공리주의는 20대의 평균점수가 2.8971, 30대의 평균점수가 2.8634, 40대의 평균점수가 2.6834, 50대의 평균점수가 2.7404로 나타났다. 이것은 50대를 제외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경쟁적 공리주의 성향이 더 강한 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이기주의는 20대의 평균점수가 2.9722, 30대의 평균점수가 2.9923, 40대의 평균점수가 3.1978, 50대의 평균점수가 3.3200으로 오히려 세대가 올라갈수록 점점 중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갖고 있는 윤리내용과 사회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경쟁적 공리주의’가 서로 완전히 모순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사성도 가질 수 있다. 즉, 자신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자라고 생각하면 사회전체의 이익이 중대하는 것과 자신 개인의 이익이 중대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40대까지는 세대가 올라갈수록 자신을 강자로 생각하여 이기주의이면서 동시에 공리주의적 윤리관을 가질 성향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10년간격의 연령대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통념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연령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각 개인은 한 살씩 연속해서 나아를 먹어가기 때문에 연속적인 것이다. 연령은 서열척도 혹은 비율척도이므로 이를 좀더 정밀하게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즉, 경쟁적 공리주의의 평균점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연령, 근무연수, 직급을 독립변수로 놓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회귀모델은 F 값 4.093, 유의도는 0.007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델에 포함된 세 개의 변수 중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은 공직 총 근무연수에 불과하다. 즉, 연령과 경쟁적 공리주의와는 선형적 회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표 7> 경쟁적 공리주의 회귀분석표

	비표준화		표준화된 값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 수	2.755	0.299		9.212	0.000
연 령	6.105E-03	0.010	0.067	0.614	0.540
직 급	9.025E-03	0.020	0.023	0.453	0.651
근무연수	-1.757E-02	0.008	-0.232	-2.129	0.034

10) 물론 이런 차이는 통계적 추정방법에 의하여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를 근거로 하였지만, 사실 평균점수의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에 실제 세계를 너무 과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이기주의에 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F 값 7.720, 유의도 0.000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를 연령, 직급, 근무연수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이기주의 회귀분석표

	비표준화		표준화된 값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2.446	0.327		7.478	0.000
연 령	1.833E-02	0.011	0.181	1.683	0.093
직 급	-4.291E-02	0.022	-0.097	-1.950	0.052
근무연수	3.653E-03	0.009	0.044	0.404	0.687

그러나 95%신뢰수준에서는 회귀모형에 포함된 연령, 직급, 근무연수 세 독립변수 모두가 유의미하지 않다. 90%신뢰수준으로 낮추면, 연령과 직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GLM분석에서는 연령대를 10년 간격으로 나눈 결과 50대가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각 응답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두 가지 통계분석기법에 따라 유의미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종의 집합효과(aggregation effect)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별로 보면 별차이가 없는 현상도 일정한 기준으로 집단을 나눠보면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어떻든, 위의 분산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이 많을수록 이기주의적 윤리관은 근소하게 증가하고 직급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직 구조의 피라미드형태를 고려하면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연령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서로 모순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3급 이상 고위 직은 매우 과소하고 중간급(즉, 5, 6급)이 많이 있다. 예컨대 중앙부처에는 5급보다는 6,7급 공무원이 더 고령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상의 통계분석결과 나타난 직급과 연령에 따른 이기주의적 윤리관의 차이는 양자를 분리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근무연수별 특성

공직사회에서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개인보다는 국가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공직에 들어오면 이러한 공직문화가 가지고 있는 규범을 획득하는

일종의 내부사회화를 거치게 된다(조석준, 1992). 앞에서 연령층별 비교를 하였으나, 사실 연령층은 외부사회화를 포함한 일반적인 성숙효과를 보는 데 적합한 반면, 공직에서 근무한 연수는 주로 내부사회화의 효과를 알아 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근무연수는 응답자로 하여금 총 공직근무연수를 ()년, ()개월로 쓰도록 하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 1년 미만, 1-3년, 3년-5년, 5년-10년, 10년-20년, 20-30년, 30년 이상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눈 근무연수 층별로 네 가지 윤리관에 대한 평균점수가 차이가 있는가를 GLM방법으로 추정해본 결과 약한 상대주의를 제외한 경쟁적 공리주의($p=0.022$, $R\text{자승}=0.031$), 인본적 절대주의($p=0.015$, $R\text{자승}=0.034$), 이기주의($p=0.010$, $R\text{자승}=0.036$)가 모두 유의수준 0.05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근속연수대별 윤리관차이

근속연수		경쟁적 공리주의	인본적 절대주의	이기주의	약한 상대주의
1년	평균	2.9100	2.6000	3.0267	3.2933
	인원	25	25	25	25
	표준편차	0.5395	0.4390	0.4607	0.5121
3년	평균	2.9519	2.6600	2.9630	3.2469
	인원	26	25	27	27
	표준편차	0.6443	0.4500	0.4833	0.5962
5년	평균	2.8977	2.5568	2.9848	3.2727
	인원	22	22	22	22
	표준편차	0.7305	0.5560	0.6545	0.7392
10년	평균	2.8564	2.4134	3.0259	3.3754
	인원	101	101	103	103
	표준편차	0.5748	0.5092	0.6239	0.6823
20년	평균	2.8054	2.3412	3.0255	3.3208
	인원	158	159	157	159
	표준편차	0.6016	0.6423	0.7216	0.6516
30년	평균	2.5909	2.3011	3.3333	3.3525
	인원	88	88	86	87
	표준편차	0.5637	0.5700	0.6488	0.6233
합	평균	2.7929	2.3958	3.0825	3.3318
	인원	420	420	420	423
	표준편차	0.6010	0.5780	0.6623	0.6450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쟁적 공리주의의 평균점수는 근속연수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인본적 절대주의는 근속연수 5년 미만 집단의 점

수가 약간 높은 반면 그 이상의 근속연수 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이기주의적 윤리관은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공무원들이 평균 3.0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반면,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3년에서 10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약간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한 <표 7>, <표 8>, <표 10>에서 보면, 유의수준 0.05하에서 근속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쟁적 공리주의, 인본적 절대주의뿐이다. 즉, 이기주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한 집합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0> 인본적 절대주의 회귀분석표

	비표준화		표준화된 값 베타	t	유의도
	b	표준오차			
상 수	2.153	0.288		7.485	0.000
연 령	1.473E-02	0.010	0.168	1.536	0.125
직 급	-1.983E-02	0.019	-0.052	-1.042	0.298
근무연수	-2.142E-02	0.008	-0.295	-2.691	0.007

<표 7>과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쟁적 공리주의와 인본적 절대주의 모두 표준화된 베타값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비록 매우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공직에서 근무한 연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경쟁적 공리주의와 인본주의적 절대주의 윤리관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직에서 내부사회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공직에 오래 있을수록 국가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동시에 열악한 처지에 있는 소수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본 조사의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관이 특히 요구되는 부류의 공무원,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특정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혹은 일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이러한 결론을 일 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V. 맷는 말

본 연구는 그동안 이론적 그리고 규범적 논의에만 머물러있던 행정윤리의 문제

를 실증적인 차원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즉,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토대(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인식을 어떻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가를 검증해보는 것이다. 이것은 부록의 설문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각 공무원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사실 윤리의식과 같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은 양적인 접근에 의하여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통한 요인분석 결과 모델의 설명력이 매우 높지 않은 것은 첫째로 아직 설문지를 발전시킬 여지가 많거나, 둘째로 공무원들이 어떤 일관된 윤리관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윤리적 무감각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¹¹⁾. 전자의 경우는 향후 측정도구의 세련화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예컨대 동양적 윤리관(박병련, 2002)을 담을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설문지를 개발하는 노력도 계울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한국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즉, 모든 사회현상(혹은 정책)은 윤리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는 윤리관을 가지고 인식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Hinman, 1998:307). 적어도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어떤 윤리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혹은 상사)의 평소 윤리관이 어떤 유형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그 공무원이 담당하는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경쟁적 공리주의, 인본적 절대주의, 이기주의에 관한 설문지는 향후 발전시키면 윤리성 측정에 사용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쟁적 공리주의란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체사회의 공리수준을 높이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믿는 윤리관이다. 인본적 절대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공리를 중진시키는 것이라도 윤리적 절대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는 윤리적 태도’를 지칭한다. 이기주의란 ‘전체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사고하되 자신의 생존 및 이해관계의 극대화를 윤리적으로 옳은 것’으로 보는 윤리관이다. 이러한 윤리관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1) 표본의 편중성에서 나온 문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면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론하지 않기로 한다.

<표 11> 한국 공무원 윤리특성 요약

	구 분	특 성
특성별 차이	직급별	상위직일수록 경쟁적 공리주의 감소
	근무연수별	장기 근속자일수록 인본적 절대주의 감소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이기주의 증가
	부처별	교육부 : 인본적 절대주의
윤리적 토대	대인관계유형	원만형(54.2%)
	윤리성 자기평가	윤리성 취약층(45%)
	공통특성요인(분석제외문항)	민족우월주의, 비폭력성

본 설문지를 통하여 공무원들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윤리적 토대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90% 정도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간 변별도가 낮아서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의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공무원들은 민족우월적이고 비폭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윤리성에 대해서 아주 윤리적이라고 믿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연극을 상정하여 역할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상대들과 조화를 이루는 원만형이 지배적이었다.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네 가지 윤리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연령별, 부처별, 직급별, 근속연수별로 차이가 있는가는 공무원내 소집단간 미시적 차이라고 할 수 있었다¹²⁾. 비록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절대적 인본주의적 성향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기주의가 강한 편이며, 근무연수가 올라가면 인본적 절대주의가 감소하고 있으며, 직급이 올라가면 경쟁적 공리주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유형의 설문지의 개발은 학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적으로는 그동안 미국과는 다른 한국적 행정문화가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윤리교육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공직윤리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실무적인 면에서는 공무원의 채용, 교육, 조직관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12) 약한 상대주의의 경우 연령, 직급, 근무연수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F값 0.362, 유의확률은 0.780으로 모델전체가 90%신뢰수준에서 기각된다. 독립변수별로도 유의확률은 연령 0.3, 직급 0.862, 근무연수 0.354로서 각각 기각된다.

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이 이러한 윤리관을 고려하지 않은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본 연구는 상징체계로서의 인사행정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예시한 것이다(임도빈, 2001). 즉, 공직생활에 필요한 윤리관이 규명된다면 바로 이 바람직한 윤리관을 각종 채용시험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한국 공무원의 윤리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중 부족한 것을 교육훈련을 통하여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부처별, 직급별 등 여러 특성별로 윤리의 차이를 규명하면 그 조직의 운영방법이나 장관을 비롯한 장(長)의 윤리적 자질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설문대상자를 일반국민들에까지 확대한다면 학문적인 관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윤리를 공직자윤리와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한국사회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범사회적(societal) 윤리와 공직사회의 윤리는 서로 상이한 것인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신복, “정책분석 및 연구의 윤리성,” 「행정논총」 제27권 제2호, 1989.
- 김종술, “대학과 중용을 통해서 본 공무원의 윤리관: 현상학적 해석,”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1992.
- 김항규, 「행정철학」, 서울: 대영문화사, 1994.
- 김호섭, “공무원의 윤리적 행위를 위한 조직의 전략,”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1호, 1993.
- _____, “행정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본 행정윤리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제24권 제1호, 1990.
- _____, “행정책임의 윤리,”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1991.
- 노화준, “한국에 있어서 정책분석 윤리문제의 성격과 발생양태,” 「행정논총」 제27권 제2호, 1989.
- _____, “과학기술윤리와 국가의 역할: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권4호, 2001.
- 박병련, “동양적 공직윤리의 사상적 맥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02.
- 박정택, “정책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4권 제2호, 1990.
- 박홍식,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과 행정윤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 아리스토텔레스(최명관 옮김), 「니코마코스윤리학」, 서울: 서광사, 1985.
- 유홍립, “공무원의 도덕적 행위연구에의 심리학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행정학보」 제24권 제3호, 1990.
- 이상안, 「공직윤리봉사론」, 서울: 박영사, 2000.
- 이서행, “한국행정윤리 연구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학보」 제20권 제1호, 1986.
- 이영진, 「코칭론」, 서울: 도서출판 무지개사, 2002.
- 임도빈, “신인사행정체제의 모색,” 「행정논총」 제39권 제1호, 2001.
- _____, “행정윤리의 분석틀 모색: 서양철학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0권 제1호, 2002.
- 임의영, “행동, 행위, 프라시스 개념의 행정윤리적 정향,”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1996.
- _____, “행정윤리론의 대안적 인간관: 정치적 실존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2000.

- 임종철 외,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대 출판부, 1994.
- 전수일 외, 「공무원 관리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0.
- 정용덕, “행정윤리의 다면성,” 「행정논총」 제39권 제4호, 2001.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대명출판사, 2001.
- 정철현, “환경공무원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1997.
- 정현식 · 유임수 · 김광수,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97.
- 최병선, “정부주도의 경제사회운영과 행정윤리,” 「행정논총」 제39권 제4호, 2001.
- 홍준형,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행정논총」 제34권 제1호, 1996.
- 황경식 · 정원규(역) (D. F. Thomson 저), 「공직의 윤리」, 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9.
- Bourdieu, P., *Noblesse d'Etat*, Paris: Minuit, 1989.
- Cooper, Terry L.,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an approach to eth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 London: Kenniat press, 1998.
- Feldman, Fred, *Kant's Ethical Theory: Exposition and Critiqu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8.
- Fox, Charles J., “The use of Philosophy in Administrative Ethics,” in Cooper (ed).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New York: Marcel Dekker, 1994.
- Harmon, M., *Responsibility as Paradox: A Critique of Rational Discourse on Governance*, New York: Sage, 1995.
- Hinman, Lawrence M., *Ethics: A Pluralist Approach to Moral Theory*, San Diego: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8.
- Kant, I. in K. Abbott(trans. by),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in Sommers(ed.), *Right and Wrong*,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86,
- Kohlberg, L.,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Goslin, D.A.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9
- Rachels, James, “Egoism and Moral Skepticism,” in Steven M. Cahn(ed.), *A New Introduction to Philosophy*,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1.
- Rest J.R.,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Uni. of Minnesota Education Press, 1979.
- _____, *Guide for the DIT using optical scan forms and the centers scoring service*, Minneapolis, MN: Uni. of Minnesota Press, 1987.
- Williams, Bernard, “An outline of a System of Utilitarian Ethics,” in J.J. C. Smart & Bernard Williams(ed.), *Utilitarianism: For and Again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설문지문항¹³⁾

1. 외국에서 말고기, 달팽이 등을 먹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을 수 있으므로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다. 즉 옳고 그르다는 잣대는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 국가의 임무는 신체적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데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벗어난 정부의 권력행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가능한 인간성 존중과 자유보장이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3.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 인류사회가 옳다고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합리적인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윤리적 규칙이 존재한다. 예컨대 절도, 살인, 폭력, 강간, 동성애는 어느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5. 국가는 포르노 영화가 사회의 윤리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포르노 영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독신자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 전체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6. 테레사 수녀와 같은 인물이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빈민국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절대 빈곤 수준을 넘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해야 하기 때문에 자선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불쌍한 사람을 돋는 것도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
7. 비록 간혹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는 범죄 예방율을 높이기 위해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즉,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감수되어야 한다.
8. 어느 배가 폭격을 받아 침몰 중에 있는데, 구명 보트에는 20명밖에 승선할 수

13) 답지는 다음과 같이 공통적임.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폭격 받은 배에 승선한 사람은 24명이므로 구명보트에 타지 못할 4명은 죽게 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4명은 공습에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구명되더라도 조만간에 죽거나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울 것이다. 누구도 자진해서 배에서 내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의 선장은 부상자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선장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다.

9. 정보 장교가 몇몇 포로들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죄수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위협이 단순히 엄포에 불과하다면 그 죄수들이 자백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 앞에서 (무고할지도 모르는) 다른 죄수를 총살시켰다. 비록 나라를 위해서 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뺏은 이 정보장교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10.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다. 각 사회에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고 그것이 곧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인도에 귀화해서 산다고 가정할 경우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지침을 적게 가져온 신부를 화형시킨다면 내가 이를 비난하거나 저지할 권리도 필요성도 없다
11. 인생에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을 성취했다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남을 속이거나 괴롭히지 않고 선하게 살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12. 시대가 변화면 윤리도 변해야 한다. 즉 조선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인류 보편의 윤리기준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세대간 윤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내 자식들이 내 세대와 완전히 다른 윤리관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13. 박정희 기념관은 박대통령의 경제개발 공로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많은 민주적인 인사들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기념관의 추진에 반대한다. 아무리 국민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하더라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14. 보험은 다수가 소수의 불행을 대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제도는 잘 작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부자이고 개인적으로 건강하여 보험이 ‘불필요한’ 사람이라도 ‘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사람이다.

15. 한국인이 미국으로 가서 원정 출산하여 낳는 아이가 한해 5,000명이 넘는다고 추산된다. 이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더 좋은 교육과 병역혜택을 얻기 위한 것 이므로 또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나도 원정출산이 가능한 상황도 위치에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16. 환자가 자신의 참된 건강상태를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더라도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 즉,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17. 내가 억울하게 (예컨대 수혈에 의하여)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 걸렸다고 가정하자. 그동안 죄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불행이 온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니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것도 크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다.
18. 카파라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진을 찍어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19. 기여금 입학제도는 기부금을 통한 학교 재정상태 강화는, 소수(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0.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추진 중인 대체 복무제도는 도입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비록 국방문제에 지장이 있더라도 각 개인은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질 권리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21. 지나온 삶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려할 때 나 자신은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다.
22. 좀 있으면 즐거운 학교 축제. 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회의 끝에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다. 배역도 거의 정했는데 4개가 남았다. 어떤 역이든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어떤 배역을 택할 것인가?
 - 1) 일단 연극이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모두가 맡기를 싫어하는 역
 - 2) 살인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비인간적인 역은 절대로 안됨
 - 3) 악역, 선한 역 등 여러 가치관을 가진 여러 인물들과 잘 조화하는 역
 - 4) 관객의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역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the Ethical Beliefs Held by Korean Bureaucrats

Tobin Im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results from an investigation of ethical beliefs held by Korean bureaucrats.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scribes the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e study in order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ethical attitudes held by respondents. Using a factor analysis of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e are able to discover four principal ethical attitudes implicit in the judgments of right and wrong used by bureaucrats in their competitive utilitarianism, humanistic absolutism, ethical egoism, and weak relativism. Based upon this empirically derived ethical typology,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investigates the ethical beliefs reflected in the responses of civil servants in Korea. Most Korean bureaucra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share patriotic and non-violent attitudes and regard themselves as being compatible with all sorts of personality types. Beyond these shared attitudes, ethical beliefs held by Korean bureaucrats display a relatively small variation in terms of the four types of ethical thoughts explained by department affiliation, age, work experience in public sector, etc.

【 Key Words: Korean bureaucrats, ethical attitude, Absolutism, Utilitarianism, Egoism 】